정개특위 통과 선거구획정안

농어촌 현실 무시한 전형적 '게리맨더링'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1일 최종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농어촌 지역을 무시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획정안은 한나라당안을 수용하면서 대신 여수(2곳), 대구 달서구(3곳), 부산 남구(2곳)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는 광주 광산구가 분구되고 전남에서는 광양·구례가 광양 단일 선거구로, 담양·장성·곡성이 담양·곡성·구례로, 함평·영광이 함평·영광·장성으로 조정됐다. 또 강진·완도 선거구를 없애고 해남·진도에 완도, 장흥·영암에 강진을 묶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선거구 획정은 전남 농어촌 지역 시·군 선거구를 임의대로 조정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누더기 선거구 획정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영남 반발에 민주당안 포기하고 한나라안 수용

전남 공통성·연계성 없이 조정 '누더기 선거구'

◇**영남의 반발에 물러난 민주당** = 이번에 확정한 안은 여수만 제외하고는 한나라당 안이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여수 선거구 통합을 주장했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전남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전남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되 여수의 통합을 용인하는 안을 냈다. 이 경우 한나라당 안은 전남에서 두 선거구가 줄고, 민주당 안은 한 곳만 줄게 된다.

또 영남지역의 경우 양당안 모두 부산 남구와 대구 달서구에서 각각 1곳 선거구가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영남에서는 2곳 선거구가 주는데 반해 호남에서는 1곳 선거구만 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주당 측에서도 여수가 지역구인 김성곤 의원(여수 갑)과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강하게 반발하며 여수지역 선거구 유지를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에 민주당 정개특위는 민주당안을 포기하고 한나라당 안을 수용했다. 21일 오후 민주당 측 윤호중 정개특위 간사가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만나 전격 합의한 것이다.

한나라당안을 근간으로 하면서 여수·대구 달서구·부산 남구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농어촌 현실 무시** = 하지만 이 같은 협상안에 대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개특위 소속 의원성과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기 위해 정개특위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정개특위 안에는 광주·전남지역의 최인기·양형일 의원이 참여하고 있었다.

두 의원 모두 민주당안을 계속 고집해 왔으나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양당 간사가 합의한 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여수 선거구를 살리는 대신 영남에 두 선거구를 준 것은 협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남 농어촌 선거구 1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남·진도·완도, 장흥·영암·강진이라는 대형 농어촌 선거구가 탄생됐다.

국회가 갈수록 피폐해가는 농어촌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법하다.

더욱이 이들 지역이 어떤 공통

◇**의원들 간 희비 엇갈려** = 이 같은 선거구 획정으로 최고의 수혜자는 해남·진도의 채일병 의원과 장흥·영암의 유선호 의원이다. 또 여수의 김성곤·주승용 의원도 한 시름 놓게 됐다.

반면 강진·완도 지역구가 겨사라져 이영호 의원은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을 원망해야 할 처지가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 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BBK특검 4대 의혹 수사 결과

	의혹	검찰 수사 결과	특검 수사 결과
BBK 의혹	BBK 실소유자 누구	김경준 소유	김경준 소유
	BBK 투자 유치 과정에 개입했나	장신대 등 7억원만 유치	장신대 등 7원만 유치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및 횡령에 연루됐나	당선인 관여 증거 없음	당선인 관여 증거 없음
	한글 이면계약서의 진위	계약일자 1년 뒤에 만들어진 위조 문서	위조 문서
	'BBK 명함'을 사용 했나	확인할 필요 없어 조사 안 함	명함 사용 사실 인정 하더라도 주가조작 및 횡령에 관여 했다는 직접적 증거 안됨
	광운대 동영상 발언의 진위	검찰 수사 대상 아니었음	강연 내용만으로 주가 조작 및 횡령에 관여 했다는 직접적 증거 안됨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보유 의혹	도곡동 땅 실소유자 누구	언급안함	이상은·김재정 공동 소유
	㈜다스 실소유자 누구	당선인 소유라는 증거 없음	당선인 소유라는 증거 없음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DMC 부지 분양에 당선인이 영향력 행사하고 은행대출을 도왔나	검찰 수사 대상 아니었음	공적인 업무를 보았을 뿐 특혜를 줬다는 증거 없음
	분양 당시 서울시 공무원과 한독산학간의 로비가 있었나	검찰수사 대상 아니었음	공무원 위법 행위 증거 없음
검사의 회유·협박 의혹	서울중앙지검 BBK 수사진이 김경준을 회유·협박했나	검찰 수사 대상 아님	수사 절차 적법했음

"BBK는 김경준씨 회사… 李당선인과 무관"

■ 특검 "李당선인 모두 무혐의" 결론

'도곡동 땅' 檢 수사 뒤집혀 파문 예상

특검 수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말 검찰의 BBK 수사에 이어 이번 특검까지 두 차례에 걸친 가혹한 검증의 문을 통과해 확실한 면죄부를 받음으로써 이번 특검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이 당선인과 BBK는 '무관'** =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은 당선인이 ㈜BBK투자자문의 지분을 갖진 않았지만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한 확실한 수사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17일 이 당선인을 삼청각에서 직접 조사하는 한편 'BBK 명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도 조사했다. 아울러 우리 사법권이 국내에만 미쳐 반쪽 짜리로 끝난 BBK 사건 관련 자금 흐름도를 온전히 재구성하기 위해 김경준씨에 대한 재산 몰수 소송 등 그와 관련된 각종 미국 소송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미국 연방검찰이 몰수해 놓은 김경준씨의 LA 저택과 스위스 은행의 1천700만 달러 예금이 옵셔널벤처스 횡령금 및 주가조작 이득금이라는 점 등을 새로 밝혀냈다.

하지만 'BBK를 설립했다'는 광운대 동영상 내용이 과장된 발언이었다는 수사 결론을 내면서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게 됐다.

◇**도곡동 땅, 검찰 수사 결과 뒤집혀** = 작년 8월 검찰은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땅이 이상은씨 것이 맞다고 했다.

특검이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한 데에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인' 이병모·이영배씨가 조사에 응해왔고 이상은·김재정씨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격적인 방어에 나서는 등 상황 변화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검팀은 이상은씨가 1985년 도곡동 땅 매입 당시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상은씨 측은 당시 경기도 이천시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유실적 자료, 사업자등록증, 목장경영사실증명서, 가축사육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했는데 특검은 비록 이 자료들이 도곡동 땅을 실제 샀다는 직접 증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한 자금력을 입증하는 방증이라고 판단했다.

◇**상암 DMC 의혹과** = 이 선인과 ㈜한독산학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달리 당선인은 오히려 상암 DMC 의혹과 관련해 "땅 장사나 하려는 업체는 가려내고, KDU의 공동사업 참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직접 말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당선인 의혹 무혐의 결론

'정치적 특검 무용론' 또 고개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결과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자 정치적 특검 무용론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BBK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은 수 차례 검토를 거듭한 끝에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지만 '검찰이 회유·협박했다'는 김경준씨의 메모공개를 필두로 정치권에서 몰아치는 특검바람을 걷잡을 수 없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나올 것이 있을까'라는 의문 및 '정치·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특검팀은 출범했고, 38일이라는 시간과 인력,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수사결과는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만 되풀이됐다.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모금설,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관련 각종 청탁 개입의혹 및 95억원 제공설 등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려 '용두사미식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 또한 "이광재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일정부분 관여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해외로 도피한 석유전문가 허문석씨를 조사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발표해 실망만 안겨줬다.

이처럼 권력형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수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을 주는 특검제도는 기대도 크지만 항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자칫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